

입법정책정보

-제16호-



대전광역시의회

○ 입법정책정보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사항과 최신 외국정보 등을 법제처 국가정보센터,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참고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 대전광역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됩니다.

|| 목 차 ||

I. 상위법령 제·개정	1
1. 동물보호법 시행령	1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
4. 평생교육법 시행령	16
II.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23
1. 대구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3
2. 부산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25
III. 자치법규 참고정보	27
IV. 최신 외국 입법정보	32

I 상위법령 제 ·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4. 4. 27.] [대통령령 제34452호, 2024. 4. 26., 일부개정]

□ 제정 · 개정 이유

○ 맹견 관리 강화 및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맹견수입신고 · 맹견사육허가 · 맹견취급허가 제도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8853호, 2022. 4. 26. 공포, 2024. 4. 27. 시행)됨에 따라, 맹견수입신고 · 맹견사육허가 · 맹견취급허가를 위한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주요내용

제12조의2(맹견수입신고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맹견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0조에 따른 검역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검역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맹견수입신고서에 해당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서 “맹견의 품종, 수입 목적, 사육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맹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품종
2. 수입 목적
3. 사육예정 장소
4. 검역증명서 발급일
5. 동물등록번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2조의3(맹견사육허가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월령이 2개월 미만인 맹견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

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맹견의 율령이 2개월이 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여 중성화 수술의 증명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맹견의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소견과 그 사유가 명시된 수의사의 진단서(맹견사육허가 신청일 전 14일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로 한정한다)를 해당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6개월마다 제출해야 한다.

2. 법 제19조제3호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각각의 진단서를 말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허가 처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1. 제5항 단서에 따라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제출된 날부터 해당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진단서가 제출되기까지의 기간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기질평가에 소요된 기간

④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18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맹견의 율령이 8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맹견에 대한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소견과 그 사유가 명시된 수의사의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제12조의4(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 및 이 영 제1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1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맹견취급허가를 받은 사람
3.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4. 그 밖에 맹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제14조의2(맹견이 아닌 개의 소유자에 대한 교육이수 명령 등) 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맹견 지정을 받지 않은 개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이수를 명하거나 해당 개의 훈련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육시간과 제2호에 따른 훈련시간을 더한 시간은 총 15시간 이내로 한다.

1. 개의 소유자에 대한 교육이수: 맹견의 사육·관리·보호 및 사고방지 등에 관한 이론 교육 및 실습교육을 받을 것
2. 해당 개에 대한 훈련: 해당 개의 특성과 법 제24조에 따른 기질평가의 결과를 고려한 개체별 특성화 교육을 받을 것

제14조의3(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이하 “기질평가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기질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 기질평가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의4(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행)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되,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1. 1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필기시험인 1차 시험과 실기시험인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2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필기시험인 1차 시험과 실기시험인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자격시험의 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③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등급별 구분기준,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2에 따른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학교의 장 등에게 시험장소의 제공, 시험관리 인력의 파견, 시험 문제 출제, 시험장소의 질서 유

지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5(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제14조의4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의로 발급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 발급·관리 업무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협조 요청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 그 밖에 자격시험의 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 ③ 수탁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응시수수료 등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자격시험 응시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 ④ 수탁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제23조의2(인증기관) ① 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설립목적이나 주된 활동이 동물복지 또는 동물보호와 관련된 법인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기관의 명칭과 업무의 범위를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23조의3(맹견 취급 허가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맹견의 생산·수입 또는 판매(이하 “취급”이라 한다)에 대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맹견 취급 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맹견 취급 허가 경우

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또는 동물판매업의 허가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나.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맹견 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맹견 취급 변경허가의 경우

가. 제2항 후단에 따른 맹견 취급 허가증

나.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맹견 취급 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맹견 취급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맹견 취급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참고사항 (우리 시 관련 조례)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시행 2024. 3. 22.] [대전광역시조례 제6227호, 2024. 3. 22., 일부개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의 등록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10일 이내에 등록대상동물의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하고,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비용(무선전자객체식별장치 비용 등을 포함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유자 등이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광견병 등 예방접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하여 동물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업장 소유자 등이 출입을 금지하는 장소

2. 그 밖에 시장이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지정·고시하는 장소

제18조(동물보호 사업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동물복지 향상 및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동물 문화보급 및 문화공간 조성에 관한 사업
2. 동물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3. 동물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
4. 동물 관련 교육 및 체험사업
5. 유실·유기동물 및 길고양이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동물보호·복지향상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관내에서 반려동물 또는 동물보호를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치구 및 관련 단체·법인 등(동물보호센터의 경우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설치되거나 지정받은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보호비용의 부담) ①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동물의 보호비용의 산출기준 별표와 같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은 치료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산출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면 보호비용을 전부 면제한다.

제20조(동물의 기증·분양)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으로 위촉된 사람
2. 기증·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이나 동물실험 등으로 이용하지 않을 사람

② 시장 등은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다만, 중성화수술에 동의하지 않고 기증받거나 분양받은 사람에게는 중성화수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 등은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동물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인 경우에는 등록 후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제21조(동물보호센터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특례) 시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기증받거나 분양받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4. 19.] [대통령령 제34388호, 2024. 4. 2., 일부개정]

□ 제정·개정이유

○ 국가기관 등의 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의 성폭력 사건 처리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시정 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63호, 2023. 4. 18. 공포, 2024. 4. 19. 시행)됨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 구체화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의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않은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성폭력피해상담소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격기준으로서 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 외에 가정폭력, 성매매, 스토킹 또는 성희롱 방지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도 인정하는 등 그 자격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주요내용

제2조의3(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이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재발방지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 성폭력 예방조치 및 성폭력 예방교육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방안 마련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5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교육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말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에 의한 성폭력 사건
2. 피해자가 다수인 성폭력 사건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성폭력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 대상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참고사항** (우리 시 관련 조례)

「대전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시행 2022. 9. 30.] [대전광역시조례 제5886호, 2022. 9.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 등을 말한다.
2. “피해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
 -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제15조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여성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

4.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방안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9.30.>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나. 여성폭력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의료기관

다. 교육청,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라.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수사 및 법률기관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시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최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지원
2. 여성폭력의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3.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
4. 피해자 보호 및 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사업

5.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6. 피해자 주거 지원 사업

7. 피해자 취업 지원 사업

8. 피해자 학자금 지급 등 취학 지원 사업

9.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자치구,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수립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예방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과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1. 2.] [대통령령 제34092호, 2024. 1. 2., 일부개정]

□ 제정·개정이유

○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승용차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일부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산정할 때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설치한 주차단위구획 수의 3.5배수에 해당하는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한 것으로 보도록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주요내용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관할 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주택규모별(전용 면적: 제곱미터)	주차장설치기준(대/제곱미터)			
	가. 특별시	나. 광역시·특별 자치시 및 수 도권 내의 시 지역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시지역 과 수도권 내 의 군지역	라. 그 밖의 지역
85 이하	1/75	1/85	1/95	1/110
85 초과	1/65	1/70	1/75	1/85

2. 소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통행거리 5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소형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설치기준의 10분의 7 범위에서 완화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일 것

2)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자동차 소유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그 밖의 경우: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

3.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수를 산정할 때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일부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승용자동차를 상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설치한 주차단위구획 수의 3.5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에 해당하는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주차단위구획 총수 중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용도가 아닌 주차단위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해당 주차단위구획의 필수 설치 비율을 정할 수 있다.

1.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40 이내

2. 제1호 외의 도시지역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70 이내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은 지역의 특성,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보급정도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소형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용도변경하기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주차장법」 제19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제7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

2.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할 것

3. 세대별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일 것
4.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
- ⑥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주택단지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2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역시설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건설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참고사항 (우리 시 관련 조례)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시행 2023. 11. 6.] [대전광역시조례 제6110호, 2023. 10. 6., 일부개정]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 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세분(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등)하여 조사구역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로 구분하고, 주간·야간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3. 주차시설은 노상, 노외 및 부설 주차시설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4. 조사시기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5.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세부사항은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권고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야간시간대의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고려한 주차장확보율이 100분의 60 미만인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것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 및 학교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2.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

3.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

제13조(주거지 전용주차구획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거지 전용주차구획(이하 “주거지 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자에게 주차장 사용을 허가하며 주차요금은 별표 1의 월정기주차권의 주차요금 범위에서 해당 구청장이 정한다.

③ 주거지 전용주차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 일수(日數)마다 별표 1의 1일 주차요금 외에 그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제19조(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도시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text{면적} = \frac{\text{철도연장(km)}}{8} \times \text{인원}/210$$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1,000분의 6

③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1,000분의 6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4. 4. 19.] [대통령령 제34406호, 2024. 4. 16., 일부개정]

□ 제정·개정이유

○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기관의 신청에 따라 기관 및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 재학생 보호방안 등의 서류를 갖추어 폐쇄신고 등을 하도록 하며,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되거나 인가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평생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9345호, 2023. 4. 18. 공포, 2024. 4. 19. 시행)됨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평가 또는 인증 기준을 교육 시설·장비 및 인력의 확충·관리의 적합성 등으로 정하는 등 평생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의 평가 또는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또는 폐쇄인가에 필요한 서류에 적힐 사항을 폐쇄사유, 폐쇄연월일 및 재학생 보호방안 등으로 정하며, 학력인정시설로 지정 또는 인가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기관 등의 설치요건 중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인력의 수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주요내용

제3조의2(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2.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12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 “시·도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진흥원은 법 제20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되, 그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시설,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는 시·도진흥원의 장으로 구성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법 제2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한국수어, 폐쇄자막, 점자자료, 보조인력 및 보조기기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12조의3(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① 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란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 시설·설비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해당 시설의 운영규칙 및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유형·목적
3. 위치
4. 교육과정 편성내역
5. 경비(학습비를 받는 경우에는 학습비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과 시설의 유지방법
6. 시설·설비의 설치내역
7. 개설예정일

③ 제2항에 따른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유형·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 및 정원
3. 입소·퇴소
4. 교육기간 및 휴강
5. 학습비(학습비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적합하

면 신청인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의4(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한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운영규칙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제12조의5(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한다.

1. 폐쇄사유
2. 폐쇄연월일
3.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제22조의2(실태조사) ① 법 제2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사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현황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사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사의 활동 및 근무 현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사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및 통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의2(평생교육기관의 평가 및 인증)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평가 또는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시설·장비 및 인력의 확충·관리의 적합성
2. 교육과정의 기획·운영 등의 체계성 및 특성화 실적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기관 평가 또는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평가 또는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의 기획·운영 등의 체계성 및 특성화 실적
2.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 평가 또는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평생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을 평가한 결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평가 및 인증을 신청한 평생교육기관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평생교육기관은 옥외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및 그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해당 인증사실 및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평가 또는 인증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제3항에 따른 인증서(교육부장관 명의로 된 인증서를 말한다)의 발급 업무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진흥원

2. 평가 또는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또는 인증의 신청 등 평생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의 평가 또는 인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3조의2(평생교육시설 공시정보의 범위 등)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8의2와 같다.

② 법 제31조제4항, 제32조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시설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8의3과 같다.

③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외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8의4와 같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자료 제출 요청의 사유

2. 자료 제출 일시

3. 제출해야 할 자료의 내용

⑤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7항에 따라 공시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총괄 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진흥원

2.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⑥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별표 8의2부터 별표 8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

□ **참고사항** (우리 시 관련 조례)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시행 2024. 2. 16.] [대전광역시조례 제6201호, 2024. 2.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의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대전광역시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 사업 계획과 추진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 6의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임기)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4조(협의회 운영) ① 삭제 <2023.7.14.>

② 삭제 <2023.7.14.>

③ 삭제 <2023.7.14.>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평생교육진흥 사업)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등 유관기관 또는 관련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2(대전시민대학 운영) ① 시장은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등 관내 평생교육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 연계·협력하여 대전시민대학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대전시민대학의 장은 대전광역시장으로 한다.

③ 시장은 대전시민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의3(시민명예학위제) ① 시장은 대전시민대학이 운영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민명예학위 수여 인정요건을 갖춘 학습자에게 시민명예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요건 등 시민명예학위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대전평생교육진흥원 설립)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8조(진흥원의 사업) ① 진흥원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및 평가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3.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3의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4. 시장이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진흥원 설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진흥원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정관변경 협의내용 시의회 제출)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정관변경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대전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제10조(출연금 및 운영재원) ①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대전광역시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정부의 지원금

3. 대학,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및 기부금

4. 그 밖에 진흥원의 사업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제11조(결산) 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 제19조에 따른 결산서 제출 시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규정)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보험 등의 가입)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보험 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명당 배상 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II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대구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4. 1.] [대구광역시조례 제6110호, 2024. 4. 1., 제정]

□ 제정이유

대구광역시가 5대 미래 신산업 중 하나인 로봇산업의 중심지로 자리잡기 위해 로봇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로봇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로봇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봇”이란 스스로 보유한 능력에 따라 주어진 일을 자동으로 처리하거나 작동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2. “로봇산업”이란 로봇 및 로봇의 일부분을 이루는 부품과 이를 작동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로봇산업 클러스터”란 로봇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 지원 시설 등을 일정한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조성한 집적단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봇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로봇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로봇산업의 동향 및 발전 전망
3. 로봇산업의 부문별 추진과제 및 추진전략

4. 로봇산업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방안

5. 로봇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인력 양성 방안

6. 그 밖에 로봇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역 로봇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관련 기업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요 시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봇산업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로봇 관련 기술 개발 촉진 및 기반 조성 사업

2. 로봇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3. 로봇 관련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 지원사업

4. 로봇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5.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세미나 및 포럼 등 개최

6. 기술·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로봇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로봇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로봇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 17.] [부산광역시조례 제7248호, 2024. 4. 3., 제정]

□ 제정이유

민간차원의 국가유산 보호활동을 지원하고, 국가유산의 가치 인식 향상 등을 위하여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 및 향토문화 계승·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지킴이”이란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국가유산지킴이 중 시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소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이란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와 국가유산의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과 필요한 협력을 위하여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추진계획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관내 청소년이 국가유산지킴이로 위촉되었을 경우,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6조(홍보)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 시장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III 자치법규 참고정보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1.

[안건번호: 의견24-0058 / 요청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 의뢰안건

「주차장법」에서는 개방주차장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보조금 지급이 아닌 형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주요내용

[질의요지]

「주차장법」에서는 개방주차장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지급이 아닌 형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개방주차장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이 아닌 형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주차장법」 제19조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13항),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16항), 이 사안에서는 개방주차장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이 아닌 형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고,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참조).

먼저, 「주차장법」 제19조제16항에서는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여기서 “등”은 사전적으로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로서,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으로 보아야 하며,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3. 7. 31. 의견제시 23-0201;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살피건대, 「주차장법」 제19조제16항에서 조례 위임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각각 개방주차장 지정·운영을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예시한 것이므로, 그 예시한 사항만을 조례에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여기서 예시하고 있는 각각의 사항 간에 유사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주차장법」 제19조제6항에서의 “등”에 ‘보조금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지원에 관한 사항만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방주차장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주차장법」 제19조제13항부터 제16항까지의 규정은 2020년 2월 4일 법률 제16951호로 「주차장법」이 일부개정되어 신설된 규정으로서 공공기관 등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신설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각주: 「주차장법」(법률 제16951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주차장법」 제19조제16항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예시한 사항으로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은 부설주차장의 개방주차장 지정·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공의 목적을 위해 시설 사용에 협조한 부설주차장 소유자 등에 대한 재정적 보상, 부담 경감 등의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개방주차장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이 아닌 다른 형태의 지원도 가능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주차장법」의 규정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방주차장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이 아닌 형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2.

[안건번호: 의견24-0023 / 요청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 의뢰안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각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인 요양보호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주요내용

[질의요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각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인 요양보호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 즉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각주: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제5항에서는 장기요양요원(각주: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가목)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중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는데(각주: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두7135 판결 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장기요양급여고시”라 한다) 제23조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가족(각주: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함(「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제1항.)인 요양보호사(이하 “가족요양보호사”라 한다)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의 급여비용 산정에 대하여, 가족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으며(제3항), 동일한 시간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제4항 및 제6항) 일반 요양보호사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하회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요양보호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바가 없을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해당 조례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참조)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의 간병·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모든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해서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징수(제8조 및 제9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제공기준·절차·방법·범위(제23조),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비용 청구 및 지급(제38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제39조)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한편, 현행 「김해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는 김해시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통하여 돌봄서비스 질을 제고하려는 조례로서(제1조),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5조), 이 사안의 경우 「김해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를 개정(이하 “김해시개정조례안”이라 한다)하여 가족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살피건대, 이 사안의 김해시개정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일부로서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범위 및 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달리, 가족요양보호사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김해시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는 규율하려는 목적이 다른 것으로 보이고, 김해시개정조례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외의 소득을 추가로 보전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필요와 재정 수준에 따른 복지 행정의 차이에 해당하는 것이지 김해시개정조례안에 의해 노인

장기요양법령의 입법목적 및 효과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조례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안과는 달리 조례입안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조례입안자는 그 조례 제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예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고(각주: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추545 판결 참조), 그렇게 제정된 조례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상위법령을 위반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Ⅳ 최신 외국 입법정보

세계 각국의 출산휴가 규정

□ 주요내용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으로 최소 45일 이상이어야 한다. 이러한 휴가는 사업체 규모와 근로 형태 및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세계 각국의 출산휴가 규정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

독일은 「모성보호법」 제3조에 따라 여성에게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출산 6주 전부터 출산 8주 후까지 총 14주의 출산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조산, 다태아 출산, 장애아 출산 등의 경우 여성이 신청하는 때에 한하여 출산 후 휴가 기간이 12주로 연장되어 총 18주의 휴가가 부여된다. 현재 독일에서 부성휴가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유럽연합 「부모 및 보호자의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남성에게도 출산 후 최소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러시아

러시아는 「노동법」 제255조에 출산휴가와 관련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출산휴가는 달력일을 기준으로 임신한 여성에게 출산 전후 기간에 제공한다. 이 법 제14조에 “달력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기간에는 휴무일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출산휴가 일수 산정에 일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휴가 일수는 일반 임신의 경우 출산 전후 각각 70일씩 총 140일이 주어지지만, 다태아 임신의 경우 출산 전 84일 출산 후 110일로 규정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1955 고용법」에 따라 일요일, 휴일을 포함하여 연속으로 98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한다. 출산휴가 신청은 출산 전 9개월 동안 90일 이상 근무한 경우 또는 4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가능하다. 제40조에 따르면 출산 예정일 직전 60일 이내에 고용주에게 출산 예정 사실과 출산휴가 시작 날짜를 통보해야 한다. 출산휴가는 출산일 30일 전 또는 출산일 이후가 될 수 없지만 임신으로 인한 직무수행의

어려움을 증명하는 경우 출산휴가를 시작할 수 있다. 제60FA조에 따르면 기혼 남성의 경우 7일의 유급 육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 수에 관계없이 5회로 제한한다.

미국

연방법은 「가족 및 의료 휴가법」으로 성별에 관계없이 일정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연 최대 12주의 부모휴가를 보장한다. 이 12주에는 주말과 공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바, 미국 노동부는 시간으로 환산하여 휴가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을 권한다. 이 부모휴가에는 육아휴가도 포함된다. 부모휴가는 출산 전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반드시 연속하여 사용할 필요는 없다. 또한 이 법에 따라 고용주는 부모휴가를 무급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주법에서 별도로 출산휴가 등 부모휴가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 주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베트남

베트남은 「사회보험법」 제34조에 따라 출산기 여성근로자에게 공휴일, 설연휴, 주휴일을 포함하여 출산 전후 6개월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며, 출산 전의 휴가 기간이 최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쌍둥이 이상을 출산하는 여성근로자는 둘째 자녀부터 1인당 1개월의 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복직 첫 30일 이내에 건강이 아직 회복되지 않으면 최대 10일의 건강회복 휴가 또한 사용할 수 있다.

브라질

브라질은 「노동법」 제392조에 따라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연속하는 최소 12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한다. 입양의 경우 입양아가 입양된 날로부터, 태아가 사산된 경우 사산된 날부터 계산된다. 여성 근로자는 출산 28일 전부터 출산일 사이에 사용자에게 출산휴가를 통보할 의무를 지며, 출산 전후 의사 소견서에 의해 기존의 120일 휴가를 2주 연장할 수 있다. 남성근로자는 배우자 출산 후 5일간의 출산 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입양의 경우도 동일하다.

스페인

스페인은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16주의 유급 출산휴가를 부여한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또한 16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16주의 출산휴가 기간 중 6주는 의무적으로 출산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스페인 정부는 출산휴가를 기존 16주에서 20주로 늘릴 계획이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2001 아동발달공동저축법」 제9조에 따라 여성근로자에게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총 16주의 출산휴가를 부여한다. 해당 휴가는 출산 4주 전부터 미리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8주간은 연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남은 8주의 기간은 사용자와 합의를 거쳐 출산 1년 이내에 언제든지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에서는 「2021년 제33호 노동관계규정에 관한 연방법」 제30조에 따라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일부터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한 6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첫 45일은 전액유급휴가, 이후 15일은 임금의 절반이 지급되는 유급휴가로 한다. 사용자는 출산예정일의 직전월 말일부터 근로자가 의료기관 증명서류를 통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출산휴가를 허용해 주어야 한다.

영국

영국 「1996 고용권리법」에 따르면 모든 여성근로자는 출산전후 26주의 일반출산휴가(Ordinary Maternity Leave)와 26주의 추가출산휴가(Additional Maternity Leave)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출산 후 2주(공장근로자의 경우 4주)는 의무휴가기간이다. “주”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의미하며, 법정공휴일(bank holiday)은 출산휴가 이후 복귀 시 연차에 추가된다. 출산휴가는 빠르면 자녀의 출산예정일 11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자녀가 예정일보다 일찍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 후 바로 개시된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노동법」 제82조에 따라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연속적으로 3개월의 출산휴가를 부여한다. 이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출산 전에 15개월을 미리 사용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3월 25일 모자복지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통과시키기로 합의하였는데, 해당 모자복지법안에 따르면 여성근로자는 최소 6개월의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일본

일본은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여성에게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출산 전 최대 6주, 출산 후 최대 8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한다. 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하더라도 산후휴가는 실제 출산 시부터 계산한다. 또한, 남성은 「육아휴직, 간병휴직 등 육아 또는 가족을 간병하는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의 산후휴가기간에 육아휴직과는 별개로 최장 4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자녀의 출생일부터 8주가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까지 취득 가능하며,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중국

중국은 「여성 근로자 노동 보호 특별 규정」 제7조에 따라 총 98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난산인 경우 15일, 다태아인 경우 태아 1명당 15일을 각각 추가로 부여한다. 이 기간 중 최대 15일은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다. 위 법령은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출산휴가를 부여한다고 명시한 광둥성의 「직원 휴가 대우 및 사망 위로 대우 규정」과 같이 여러 지역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태국

태국은 2019년 4월 4일에 「2019년 근로보호법 (제7권)」을 통하여 「1998년 근로보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을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이 법 제41조에서 기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규정되었던 출산휴가 기간이 98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연장되었으며, 이 기간에는 산전 검사 등을 위한 휴가 및 휴일 등이 포함된다.

튀르키예

튀르키예는 「노동법」 제74조에 따라 출산 전 8주와 출산 후 8주로 총 16주간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기간은 주 단위로 책정되어 주말과 공휴일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개념으로 확인된다. 단, 근로자가 원할 시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산 3주 전까지 근로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기간은 출산 후 휴가기간에 이월된다. 또한, 근로자가 출산 시 또는 출산 후 사망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출산 후 휴가일수는 배우자에게 양도되며, 만 3세 미만의 유아를 입양한 근로자 혹은 배우자에게는 입양일로부터 8주간의 출산휴가가 부여된다.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 「노동법전」 제L1225-16조부터 제L1225-28조 등에서 우리나라의 출산휴가에 해당하는 모성휴가와 부성휴가를 규정한다. 임신부의 경우 출산 전 휴가로 6주, 출산 후 휴가로 10주 총 16주를 자동으로 부여받는다.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출산 전 휴가는 3주까지 축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출산 후 휴가는 늘어난다. 다태아인 경우 모성휴가는 최대 총 46주까지 부여되며, 해당 가정에 이미 2자녀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10주의 출산휴가가 추가로 부여된다. 부성휴가의 경우 주말, 공휴일을 포함하여 총 25일이 부여되며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세계 각국의 출산휴가 규정」, 공공누리 제1유형, 2024 4. 19..